

“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”
2023년도 업무계획



“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”
2023년도 업무계획



“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”

2023년도 업무계획



국가인권위원회



목 차

I. 인권환경과 업무 추진 방향 3

II. 전략목표별 업무 추진 계획 9

전략목표 I. 급변하는 인권환경과 지구적 재난위기상황에 선제적 대응 10

- ① 재난상황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 11
- ② 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 13
- ③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인권 보호 14
- ④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 16
- ⑤ 새로운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경영 강화 18
- ⑥ 스포츠인권환경의 패러다임 전환과 스포츠인권 강화 22
- ⑦ 북한인권 개선 강화 24

전략목표 II. 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 강화 26

- ①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·제도화 및 혐오표현 대응 27
- ② 인종차별 대응과 이주민·난민 인권보호 29

③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기반 구축	32
④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	35
⑤ 아동·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정립 및 법제도 개선	39
⑥ 형사사법절차의 인권친화적 개선	43
⑦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대응과 국제협력 강화	45

전략목표 Ⅲ.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성과 역량 제고 50

① 조사구제 활동의 신속성, 실효성, 전문성 강화	52
② 생애주기별 인권교육 확대와 인권문화 확산	57
③ 교류협력 내실화와 인권거버넌스 강화	67
④ 지역인권보장체계 및 인권사무소역량 강화	70
⑤ 군인권 보호·증진 체계 강화	72
⑥ 체계적 인권진단과 평가제도 마련	77
⑦ 위원회 전문성 제고와 독립성 강화	79

I. 인권환경과 업무 추진 방향

I. 인권환경과 업무 추진 방향

1. 인권환경

- 코로나19, 기후변화 등 지구적 재난·위기상황의 지속 및 대형 참사의 발생에 따라 재난 예방 및 처리 등 재난 관리의 인권적 대응 요구 증대
-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의 확산으로 사회안전망 확충 등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 이행에 있어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취약집단의 규모와 부담이 증가
- 급속한 신기술의 발전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방지 및 인권보호 방안 강구 필요
- 인권기본조례 및 인권담당 부서 축소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사례의 확산 방지 및 지방자치단체 인권보장 체계 확립을 위한 적극적 대응 요구
- 파리원칙 30주년을 맞아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개정, 평등법 입법, 인권정책기본법 입법 등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및 인권보장체계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과제의 달성 필요
- APF 의장 선출을 계기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 강화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(GANHRI) 등 국제인권사회에서 위원회의 적극적 역할 기대

2. 업무추진 방향

□ 인권 현안에 대한 전략적·선제적 대응

- 코로나19와 같은 재난, 사회적 대형 참사, 기후위기로 인한 광범위한 위협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권적 접근 방법을 통한 대응 촉진
- 정보기술, 신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

-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게도 요구되는 기업의 인권준중 책임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기업과 인권 제도화, 평가체계 확립, 인권·환경 실사의 의무화 등 국제기준 이행
-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 심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규모와 부담 증가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

□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적 인권보장 체계 마련

- 지역인권보장 체계가 내실있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인권정책기본법 입법 추진과 연계하여 위원회 역량을 투입하고, 인권시민사회영역 및 지자체와의 협력·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기반 인권옹호활동의 구심점으로서 위원회 역할 모색
- 차별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대응 전환을 목표로 평등법 제정 이후의 활동까지 포함한 전략 수립 및 시행
- APF 의장국 수임(임기 2022. 9. ~ 2024. 9.)에 따른 역할 수행을 비롯하여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이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수준을 국제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활동을 다각적으로 추진

□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성과 역량 강화

- 파리원칙 30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20년을 향해 나가는 위원회의 비전과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기 위하여 인권옹호자로서 태도·역량 함양
- 조사구제, 정책 대응 및 교육과 협력 등 위원회의 핵심 기능이자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
- 조사의 신속성과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 및 민첩한 인권현안 대응 체계 구축

○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조직, 인사, 예산 등 위원회의 독립성과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근거와 권한을 확보하고,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건 마련

□ 인권증진행동전략(2021~2025)의 업무추진 성과를 검토하여, 전략 목표·성과목표 체계의 정비 필요성 점검

II. 전략목표별 업무 추진 계획

II. 전략목표별 업무 추진 계획

전략목표 1

급변하는 인권환경과 지구적 재난·위기상황에 선제적 대응

전략목표 2

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 강화

전략목표 3

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성과 역량 제고

전략목표 I

급변하는 인문환경과 지구적 재난·위기상황에 선제적 대응

■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

번호	성과목표	관리과제
1	재난상황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재난 상황에서의 사회권 보장 강화 2. 기후위기와 인권 정책 강화
2	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2. 청년인권 보호를 위한 의제 발굴
3	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인권 보호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인권 보호체계 정립 2. 정보주체 중심의 실질적 권리보호 방안 마련
4	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초고령사회 노인의 인권보호와 증진 2.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
5	새로운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경영 강화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노동인권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2. 인권경영 내실화 및 민간기업 확산 3. 인권경영 협력 및 인식 강화
6	스포츠인권환경의 패러다임 전환과 스포츠인권 강화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스포츠인권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2. 스포츠인권증진을 위한 환류 기능 강화 3. 체육경기대회 모니터링
7	북한인권 개선 강화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북한인권의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2. 북한인권 관련 국제기구 공조 강화 및 네트워크 조성

① 재난상황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

1. 재난 상황에서의 사회권 보장 강화 [사회인권과]

○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의료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

-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간호사 인권상황 실태조사(2022) 결과 검토
-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
- 간호사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의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

○ 주거취약계층의 재난안전권 보장 방안 마련

- 재난에 특히 취약한 고시원, 반지하, 컨테이너 등 주거취약계층의 재난안전권 보장을 위한 기초자료 검토, 정책 동향 모니터링, 정책간담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
- 국가·지자체의 정책 추진상황 검토 및 입법적·정책적 개선방안 검토

2. 기후위기와 인권 정책 강화 [사회인권과]

○ 기후위기에 따른 농어민 인권보호 방안 검토

-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민의 구체적인 인권상황 실태를 토대로 농어민의 생존권, 건강권, 주거권 등 보장을 위한 정책 동향 모니터링, 정책 간담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
- 농어민의 인권 보호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제도 개선방안 제시

○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한 실태조사

- 기후위기로 인해 주거권을 침해 받기 쉬운 저지대, 하천변, 산사태 위험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파악하고 주거와 관련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하기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

○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 확산

- 주요 해외 문헌을 발굴하여 조사 및 정책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, 교육 및 홍보를

연계하여 기후위기가 개개인의 삶과 미래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권과 직결된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 확산 도모

- 자료집 발간 등 교육·홍보 콘텐츠 개발, 협업 간담회 개최

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

- (2021) 감염병 등 재난위기 상황에서 인권보호
 -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인권보장 실태조사
 - 노숙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
- (2021) 기후위기에 대한 인권적 대응 방안 모색
 -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·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
- (2021)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 인권 보장
 - 감염병시기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
- (2022) 감염병 등 재난위기 상황에서 인권보호
 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권고
 -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간호사 인권상황 실태조사
 -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
 - 재난안전상황에서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검토
- (2022) 기후위기에 대한 인권적 대응 방안 모색
 - 기후위기와 농어민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
 -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견표명

참고 후속과제

- (2024) 사회취약계층의 재난안전권 강화 방안 검토
- (2024) 기후위기와 아동·청소년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
- (2024) 기후위기와 주거권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
- (2024) 기후위기 관련 국제 협력 방안 마련

② 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

1.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[사회인권과]

-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발굴·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
 - 정책 동향 모니터링, 정책간담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
 - 취약계층의 사회보장권 강화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·지원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

2. 청년 인권보호를 위한 의제 발굴 [사회인권과]

- 청년 취업지원제도 개선방안 검토
 - 정책 동향 모니터링, 정책간담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
 - 청년이 안정적인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

참고 **관리과제 추진 실적**

- (2021) 청년 빈곤 개선방안 마련
- (2021)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방안 마련
 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」에 대한 의견표명
- (2022)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돌봄 강화 방안 모색
 -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및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
 - 간병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
- (2022) 청년인권 보호를 위한 의제 발굴
 - 청년인권 의제발굴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보고
 -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

참고 **후속과제**

- (2024)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

③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인권 보호

1.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인권 보호체계 정립 [인권정책과]

○ 인공지능(AI) 인권영향평가 도구 마련

-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침해 가능성과 사례 분석
- 국내외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관련 연구결과, 기준 등 수집·분석
-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인권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 마련

2. 정보주체 중심의 실질적 권리보호 방안 마련 [인권정책과]

○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정보격차 해소 방안 마련

- 장애인, 이주민 등 정보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정보격차 현황 조사, 관련 법제 및 기준 등 분석,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인권적 개선방안 도출

○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플랫폼노동 등 전자적 노동감시 대응방안 마련

-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산업환경 하에서의 전자적 노동감시 현황 파악, 국내외 법제 및 기준 분석, 개선방안 도출

○ 정보인권전문위원회 운영

- 정보인권전문위원회 구성·개최, 새로운 정보인권 의제 발굴

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

- (2021) 기술혁신에 대응한 정보인권 보호체계 정립
 -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요청 회신
- (2021) 정보주체 중심의 실질적 권리보호 방안 마련

- 데이터기본법안에 대한 의견표명
- (2022) 인공지능 관련 정보인권 보호
 -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
- (2022) 정보주체 중심의 실질적 권리보호 방안 마련
 -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의견표명
 -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에 대한 개선 권고

④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

1. 초고령사회 노인의 인권보호와 증진 [사회인권과]

○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제도개선

-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디지털 기기 활용에 취약한 노인 인권상황 실태조사(2022년) 결과 분석, 정부 정책 분석,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
-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소외 문제를 비롯하여 정보 접근의 어려움, 사회 관계망 축소에 따른 외로움과 자살률이 증가할 우려 등에 대한 대책 마련

○ 65세 이상 고용보험제도 가입 제한에 대한 제도개선

- 전문가 자문 또는 정책간담회
- 노년에도 생계 때문에 계속해서 일하거나 일하고자 하는 고령자에 대한 연령 차별을 해소하고,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

2.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[사회인권과]

○ 고용영역 등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노인 차별 실태조사

- 실태조사 계약 추진 및 관리
- 한국사회에서 노인이 나이를 이유로 겪는 차별 실태와 인권상황 전반에 대해 노인 당사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청취하여, 고용영역 등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노인 차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

○ 노인인권포럼 운영

- 노인인권포럼 정례적 회의 개최
- 노인이 노년의 시기에 존엄한 삶을 영위하고,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도록, 특히 취약계층으로 내몰리는 노인을 위한 사회

안전망 강화 등 노인인권 전반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인권 의제 설정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

○ 노인인권에 관한 국외 연구보고서 번역 및 자료집 발간

-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 및 유엔 노인권리협약 성안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 등을 수행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번역·발간

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

- (2021) 노인빈곤 개선방안 마련
 - 노인의 생애사를 통해서 본 인권상황 실태조사
- (2021) 노인인권포럼 운영 등을 통한 노인인권 논의 확산마련
 - 노인인권포럼 운영 및 「노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문헌 자료집」 발간
- (2021)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인권 현황 파악 및 증진방안 마련
- (2022) 노인빈곤 정책에 관한 인권적 개선방안 모색
 - 노인빈곤 개선 정책토론회(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방안) 개최
- (2022)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
 -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
 - 노인인권포럼 개최 및 「노인인권에 관한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결의문」 발간

참고 후속과제

- (2024) 내 집에서 나이들기(Aging in Place) 위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 개선방안 검토
- (2024) 노인의 존엄한 죽음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
- (2023~2025) 유엔 사회권위원회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및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등 새롭게 발표되는 자료 취합하여 후속 자료집 발간 여부 검토

⑤ 새로운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경영 강화

1. 노동인권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[사회인권과]

○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 제도개선

- 정책간담회 결과 및 실태조사 자료 검토
-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모색

○ 생활폐기물처리 종사자 노동인권 개선

- 정책간담회(토론회) 개최 및 관련 자료 검토
- 2022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에 매우 취약하고, 악취와 소음 민원으로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작업환경 등 노동인권 개선 방안 마련

○ 노동기본권 법제 및 정책 현안 대응

- 국회 입법동향 및 정부 정책 동향 상시 모니터링, 정책간담회(토론회) 개최, 전문가 자문, 자료 분석 등
- 중대재해처벌법,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개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노동인권의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등 신속하게 대응하여 노동인권 개선

○ 옥외·이동 노동자의 건강·위생권 보장 상황 실태조사

- 옥외에서 일하거나 이동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적절한 화장실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제때 이용할 수 없어 건강·위생권 등 인권 실태 파악
- 화장실 등 기본적 편의시설 제공과 관련하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인권개선방안 검토

2. 인권경영 내실화 및 민간기업 확산 [사회인권과]

○ 인권경영 정보공시(Financial Disclosure)·평가 기준 도입

- 유관 부처, 기관 및 산별 단체와 협의체 구성 및 정보공시 기준 논의
- 하반기 인권경영포럼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
- 기업의 인권준중 책임에 대한 정보공개 표준이나 공기업에 대한 평가 등 인권 경영 실사 제도화를 위한 집행수단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권고 추진

3. 인권경영 협력 및 인식 강화 [사회인권과]

○ 인권경영포럼 운영

- 기업의 인권 및 환경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실사의무화(mandatory due diligence) 법제 제정 등 새로운 정책의 확장과 국제인권 기준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여 정책수용성 제고
- 기업과 인권 관련 시민사회, 기업, 정부 및 학자 사이 정기적 소통과 현안의 공유를 통한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연 1~2회의 포럼 개최
- 기업의 인권 및 환경 실사법 제정을 위한 정책검토

○ 인권경영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

-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및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인권경영 포럼 등 국제 회의 참가, 사례 공유 및 고위급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

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

- (2021)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
 -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
- (2021) 플랫폼노동종사자 노동인권 제도개선
 - 「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」에 대한 의견표명

- (2021) 물류센터 노동자 노동인권 개선방안 모색
 -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
- (2021) 노조설립과정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
 -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정책간담회 개최
- (2021) 콜센터 여성상담원 노동인권 제도개선
 -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실시
- (2021) 공공기관·공기업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
 - 공기업 인권경영 평가 관련 정책간담회 개최
- (2021) 민간분야 인권경영 확산
 - 기업과 인권 포럼 개최 및 인권경영 도서(ESG가 묻고 인권경영이 답하다) 발간
- (2021)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
 -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모니터링 보고
- (2022)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
 - 생활폐기물처리 관련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
 -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
 -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
 - 「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」에 대한 의견표명
 -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」에 대한 의견표명
- (2022) 콜센터 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
 -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개최
- (2022) 민간기업의 인권경영·실사 제도화 기반 마련
 - 공공기관 공기업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적용 권고
 - 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 추진 결과보고

- (2022) 인권경영 내실화 및 공감대 확산
 - 인권경영 포럼 개최
 - 유엔 남아시아 기업과 인권 포럼 참가 및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참가

참고 **후속과제**

- (2024) 노동취약계층 법적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
- (2024) 인권경영 정보 공시 기준 마련
- (2024)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이행점검 실태조사
- (2024) 중견기업 인권경영 지원방안 마련 정책검토

⑥ 스포츠인권환경의 패러다임 전환과 스포츠인권 강화

1. 스포츠인권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[스포츠인권팀]

○ 스포츠인권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

-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2023년 2월 활동을 종료한 이후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
-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개정, 스포츠인권 결정례,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백서 등을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현장 적용의 실효성 제고

2.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환류 기능 강화 [스포츠인권팀→인권정책과]

○ 권고 이행점검

- (점검대상) ‘체육 중·고 체조 종목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훈련 체계 개선 등에 대한 의견표명’, ‘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표명’ 등 2건
- (점검내용) 피권고기관 이행계획 대비 추진실적, 개선 방향 등 확인·점검
- (점검방법) 피권고기관 방문 점검, 통계자료를 활용한 개선의 효과 파악, 관계 기관·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 등

○ 스포츠 분야 취약종목 제도개선

- 스포츠 분야 취약종목 현황조사, 관련 규정 및 기준 등 분석, 스포츠 분야 취약 종목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
-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취약종목 관련 자문 및 개선안 도출

3. 체육경기대회 모니터링 [스포츠인권팀→인권정책과]

○ 주요 체육경기대회 모니터링

- 2023년 전국체육대회, 전국소년체육대회, 전국장애인체육대회, 전국 규모의 종목별 대회 등 주요 경기대회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모니터링

- 2023년 하계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대비 대표선수 훈련과정을 모니터링하여 대회 준비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점검 및 실태 파악

참고 **관리과제 추진 실적**

- (2021) 스포츠 분야 조사·구제 활성화
- (2021) 스포츠 분야 인식개선 및 홍보
 - 유튜브 홍보(스포츠 인권 리스펙트 시리즈, 즐거워야 스포츠다)
- (2021) 스포츠 분야 정책대안 모색 및 정책권고 모니터링
 - 빙상종목 운동선수 및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
- (2021) 스포츠 분야 경기대회 모니터링
 - 2021년 주요경기대회 모니터링 실시
- (2022) 스포츠 분야 조사·구제 활성화
- (2022) 스포츠인권 홍보
 - 2022년 스포츠인권 온라인 플랫폼 제작
- (2022) 스포츠 분야 정책대안 모색 및 정책권고 모니터링
 -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표명
- (2022) 스포츠 분야 경기대회 모니터링
 - 2022년 주요경기대회 모니터링 실시 및 관계부처, 체육회 관계자 결과 공유
- (2022) 스포츠인권 현장 및 가이드라인 정비
 - 스포츠인권 현장 및 가이드라인 정비 정책 라운드 테이블 개최
 - 스포츠인권 현장 및 가이드라인 개정(안) 전원위 상정

참고 **후속과제**

- (2024) 스포츠 분야 취약종목 개선방안 마련
- (2024) 스포츠 분야 경기대회 인권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검토

⑦ 북한인권 개선 강화

1. 북한인권의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[인권정책과]

○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검토 및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운영

- 북한인권 현안 대응방안 마련 및 정책적 개선 과제 발굴
- 북한인권 현안과 관련하여 국내 북한인권 관련 활동 기관·단체 등과 간담회, 현장 방문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
-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운영

○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지원정책 개선 검토

-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실태와 지원제도를 분석하여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모색

2. 북한인권 관련 국제기구 공조 강화 및 네트워크 조성 [인권정책과]

○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

-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동향 모니터링
-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방안 마련

○ 북한인권 관련 국제인권기구 협력 강화

-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,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협력 등 유엔 인권기구 및 인권단체와의 협력 강화

참고 **관리과제 추진 실적**

- (2021) 북한인권의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
 - 인권NAP 권고를 위한 북한인권 관련 국가정책 분석 연구용역(7. 13. ~ 10. 12.)

-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에 대한 위원장 성명(12. 17.)
- (2021) 북한인권 관련 국제기구 공조 강화 및 네트워크 조성
 - 2022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(서울, 11. 29. ~ 11. 30.)
- (2022)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
 -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는 포용사회를 위한 위원장 성명(1. 12.)
 -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북한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(4. 25. ~ 10. 21.)
- (2022) 국제협력 활성화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모색
 -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(엘리자베스 실비아 살몬) 위원회 방문(8. 30.)
 - 2022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(영국 런던, 10. 20.)
 - 국제협력을 위한 영국 국제인권기구 방문(국제엠네스티, 10. 18.)

■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

번호	성과목표	관리과제
1	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·제도화 및 혐오표현 대응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평등사회 구현 위한 법·제도적 기반 확충 2. 혐오표현 대응 역량 강화 지원
2	인종차별 대응과 이주민·난민 인권보호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각지대 이주민 인권증진 및 이주인권 모니터링 2. 인종차별 철폐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 3.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
3	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기반 구축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성차별 해소 및 성평등 정책 연구 2. 조약기구 대응활동 강화 3. 성평등포럼 운영을 통한 성평등 현안 지속 발굴
4	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장애인 인권보호 정책연구 및 현안대응 2.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강화 3. 정신장애인 편견해소 및 사회통합 체계 구축 4. 장애차별 판단기준 마련
5	아동·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정립 및 법제도 개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아동인권모니터링 및 보고대회 2.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방안 마련 3. 학생인권 개선 방안 마련 4. 취약 아동 인권 개선 방안 마련 5. 조약기구 대응 활동 강화
6	형사사법절차의 인권친화적 개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보장방안 마련 2. 집회와 시위 관련 제도개선
7	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대응과 국제협력 강화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제인권제도 심의 및 국제인권정책 대응 강화 2.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제고 3. GANHRI 및 국가인권기구 교류·협력 4. APF 교류·협력 및 APF 의장 업무 수행 5. 국제인권 현안 대응

①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·제도화 및 혐오표현 대응

1. 평등사회 구현 위한 법·제도적 기반 확충 [차별시정총괄과]

○ 국회 평등법 입법추진 및 입법 후속조치 지원

- 국회 및 관계기관 평등법 제정 지원방안 협의
- 국회 입법 논의 진행에 따른 평등법 쟁점 대응논리 개발 및 팩트체크
- 법안 및 주요쟁점 설명자료 제공 등 국회 평등법 입법추진 지원
- 평등법 입법추진 위한 관계그룹 협력 및 전문가회의 등 실시
- 국민적 공감대 확장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
- 평등법 시행령 작업 등 입법 후속조치

2. 혐오표현 대응 역량 강화 지원 [차별시정총괄과]

○ 혐오표현 확산 방지 및 대응 역량 강화 지원

- 혐오표현 자율대응 교육, 홍보 등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혐오 대응을 위한 위원회 종합추진 계획 수립 및 지원,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.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
- 기관·기업·시민사회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자율규제, 훈련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혐오·차별 확산 방지
- 인권사무소를 중심으로 혐오표현의 대상 집단의 가시화, 대상 집단의 인권 옹호를 위한 지지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

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

- (2021) 평등사회 구현 위한 법·제도적 기반 확충
 - 21대 국회에 조속한 평등법 제정촉구 성명(2021. 6.), 평등법입법추진 전략회의 등 입법지원 활동으로 위원회 평등법 시안을 기초로 2021년 3개

법안 발의(더불어민주당)

- (2021) 혐오차별 확산에 대한 적극 대응
 - 혐오차별 대응 교재 개발, UCC·만화 공모전 등 교육영역 혐오차별 자율 대응 공동선언 후속사업,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성명, 정부홍보물 혐오표현 실태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모색,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
- (2022) 평등사회 구현 위한 법·제도적 기반 확충
 - 2022평등에 관한 인식조사(4월), 국회 계류 4개 법안에 대한 법사위 등 요구자료 제출(법안심사자료 검토보고서 등) 및 공청회 지원, 법제정 촉구 위원장 성명(5월) 등
- (2022) 혐오차별 확산에 대한 적극 대응
 - 대통령선거, 지방선거 관련 정치인 54개 언론사 보도·공약집 혐오표현 기획조사(4~6월), 제8대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혐오표현 방지 위한 위원장 성명 및 협조 요청(5월), 2022년 상·하반기 교육·온라인·언론 영역 자율 대응 현황 모니터링 등

참고 후속과제

- (2024) 하위법령 검토 등 제정이후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준비
- (2024) 평등법 제정을 위한 국내·외 협력기반 강화
- (2024) 혐오표현 자율규제 이행 강화 방안 검토

② 인종차별 대응과 이주민·난민 인권보호

1. 사각지대 이주민 인권증진 및 이주민권 모니터링 [인권침해조사과]

○ 취약 이주민의 인권증진 방안 검토

-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
- 계절 이주노동자 입국과정 및 인권침해 실태 모니터링,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장려조례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등 결혼이주여성 관련 조례 모니터링,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관련 모니터링 실시
- 전문가 자문,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 통해 인권개선방안 검토

○ 난민정책 모니터링

- 우크라이나, 아프간, 미얀마 등 내전 및 국가간 전쟁으로 인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관련 실태 파악 및 관계부처 협의
- 출국대기실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대회 개최

2. 인종차별 철폐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 [인권침해조사과]

○ 인종차별 철폐 및 이주민 인식 제고

- 인종차별철폐협약 정부보고서 모니터링 및 국내 이행 관련 독립보고서 제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추진
- 주한 각국 대사관 직원 대상으로 인종차별 실태 모니터링 실시
- 이주민 혐오 사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(통계적 접근)과 홍보물 제작(유튜브 쇼츠, 카드뉴스 제작 등)을 통해 인식 제고

3.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[인권침해조사과]

○ 국경에서의 인권 원칙과 지침 관련 활용 워크숍 개최

- ‘국경에서의 인권 원칙과 지침 관련 활용 워크숍’ 개최를 위해 국제기구·관계부처·시민사회·연구학회 등과 협의 및 네트워크 구축
- 국경에서의 인권 원칙과 지침 교육 매뉴얼 발간을 통해 우리사회의 이주민·난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

○ 국제인권기준 이행 등 국내외 협력 강화

- 미등록 이주민의 구금 관련 관계부처 협의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구금 대안 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기반 마련
-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을 위한 해외 모니터링 및 네트워크 구축

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

- (2021) 사각지대 이주민 인권증진 강화 및 이주민권 모니터링
 - 인신매매, 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
 -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등
- (2021) 인종차별 철폐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
 - 선원 이주노동자 여권 압수관행,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절차, 난민신청자 심사절차 등에 대한 모니터링
 - 이주민 인식제고를 위한 북콘서트 개최, 미등록 이주아동 인식개선 캠페인 영상제작 및 카드뉴스 배포 등
- (2021) 국제인권기준 이행 및 국내외 협력 강화
 - 아프간인 관련, 세계 난민의 날 관련 위원장 성명
 -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권고사항 및 인신매매방지 모니터링
- (2022) 사각지대 이주민 인권증진 강화 및 이주민권 모니터링
 -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 관련 위원장 성명
 - 한국국적 아동 외국인 보호자 체류자격 변경 불허 결정에 대한 정책권고
 - 열악한 기숙사 환경 관련 농업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 권고 등

- (2022) 인종차별 철폐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
 -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0·21·22차 통합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
 -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 위원장 성명
- (2022)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
 - OHCHR 국경에서의 인권에 대한 권장원칙과 지침 감수
 - OHCHR·UNHCR·IOM 등 국제기구 현지 모니터링, 유엔난민기구 대표 위원장 면담 등 국제사회와 교류협력 강화
 - 제2회 전국이주민인권대회 개최

③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기반 구축

1. 성차별 해소 및 성평등 정책 연구 [성차별시정과]

○ 법집행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정책 점검

- 형사사법분야 법집행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판례분석 실태조사(2022)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
-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 개선 방안

○ 스토킹 범죄의 구제·대응체계에 대한 실태조사

-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된 스토킹 범죄 분석, 스토킹 피해자 심층면접, 국외의 스토킹 관련 법제, 관련 판례 연구
-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

○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태와 실효성 증진을 위한 방안 연구

-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, 형식,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, 근로자들의 효과성 등에 대한 인식조사 실시
- 실태조사를 통한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등 개선 방안 검토

2. 조약기구 대응활동 강화 [성차별시정과]

○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기 전 실무그룹에 쟁점목록 의견서 제출

-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기전 실무그룹 회의(2023. 2. 27. ~ 3. 3.)에 쟁점 목록 작성을 위하여 의견서 제출

○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에 위원회 독립보고서 작성

-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관련 제9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작성

3. 성평등포럼 운영을 통한 성평등 현안 지속 발굴 [성차별시정과]

○ 성평등포럼 운영

- 다양한 젠더 현안에 대한 토론과 합리적 모색을 통해 성평등 이슈를 발굴하고,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협력 활성화
- 국제적 젠더현안에 대한 정보공유 및 성소수자 관련 이슈 적극 반영

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

- (2021)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및 대학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
 -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 실시
- (2021) 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
 - 성소수자 차별 관련 해외 입법동향 및 사례연구
 - 트랜스젠더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
- (2021) 조약기구 대응활동 강화
- (2021) 성평등포럼 운영을 통한 지속적 성평등 현안 발굴
 - 각 분기별 1~4차 성평등포럼 개최
- (2022)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 발간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
 -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 발간
 -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
- (2022) 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판례 분석 실태조사
 - 실태조사 실시
- (2022) 조약기구 대응활동 강화
 -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(CEDAW) 제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
 -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쟁점목록 의견 제출
- (2022) 성평등포럼 운영을 통한 지속적 성평등 현안 발굴
 - 각 분기별 1~4차 성평등포럼 개최

-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기준에 관한 청문회 개최 및 「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」에 대한 의견표명 등

참고 **후속과제**

- (2024)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
- (2024)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

④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

1. 장애인 인권보호 정책연구 및 현안대응 [장애차별조사1과, 장애차별조사2과]

○ 장애인 이동권 보장 현황 모니터링

-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 시위가 이어지는 등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태 파악 필요
- 교통수단, 서비스 및 점자보도블럭 등 장애인의 이동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,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모색

○ 장애인의 시설 접근·이용 현황 모니터링

- 장애인의 시설 접근·이용 현황을 파악하고,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모색

○ 정신장애인 가족 돌봄과 지역사회 지지체계에 대한 실태조사

- 정신장애인 가족돌봄의 실태 및 문제점, 정신장애인 활동보조, 동료지원, 후견제도 등 사회적 지원실태 및 제도상의 문제점 파악
- 정신장애인 돌봄 및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선 검토

○ 정신장애인의 인권친화적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

- 정신장애인 인권친화적 치료환경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(2022) 결과 분석 및 범주화
- 정책권고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
-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및 WHO Quality Rights 등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치료환경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권고 추진

○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에 관한 정책 제안

-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 실태조사(2022) 결과 분석 및 범주화
- 정책권고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

-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·제도적 개선방안 검토

2.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강화 [장애차별조사2과]

○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른 중장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

-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에 대한 정책적, 제도적 국내 이행방안 검토
- 각계 전문가, 장애인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간담회 개최

○ 장애인권리협약 개인진정 가이드라인 제작

- 선택의정서가 비준됨에 따라 장애인권리협약의 개인진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

○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참석

-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간 연례회의 참석을 통해 국제전문가 및 국제장애 단체 등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, 장애 이슈에 대한 국제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협약 이행 강화방안 검토

○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선진모범사례 벤치마킹

-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등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역량 강화

3. 정신장애인 편견해소 및 사회통합 체계 구축 [장애차별조사2과]

○ 정신적 장애인 차별·편견 해소 사업

- 당사자·가족이 함께 하는 현장 모니터링 실시
- 모니터링 결과발표 및 토론
-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모니터링을 통해 차별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장별 정당한 편의제공 마련을 위한 방안 마련

○ 정신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 특! 캠페인

-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, 문화운동가 대상 ‘정신장애인 인권미디어포럼’ 개설 및 운영(3개 권역 운영), 정신장애인의 인권 이슈(일할 권리, 치료받을 권리,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등)에 대한 다양한 담론, 미디어 활동 교육
- 정신장애인 인권 특! 콘텐츠(미디어) 제작
- 인권 특! 콘텐츠 확산 캠페인

4. 장애차별 판단기준 마련 [장애차별조사1과]

○ 장애차별 판단기준 마련

- 장애차별 진정사건의 효율적인 조사와 권리구제를 위해서 장애차별 판단기준 정립과 이를 통한 판단의 타당성·일관성 강화 필요
- 장애차별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

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

- (2021) 정당한 편의제공 개선방안 모색
 -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
- (2021) 발달장애학생 교육환경 실태조사 후속조치
- (2021) 구급시설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
- (2021)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강화
- (2021)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법·제도 개선
 -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(2021)에 따른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권고
- (2021) 정신장애인 편견해소 및 사회참여 증진
- (2021) 시설거주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 및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
 -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아동 인권상황실태조사

-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운영실태 및 이용자 인권 실태조사
-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과 인권증진을 위한 선진사례연구
- (2022) 장애인 인권보호 정책연구 및 현안대응
 -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모니터링,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이용 모니터링, 장애차별 판단기준 모니터링, 정신장애인 인권포럼 및 정책모니터링, 정신장애인 언론모니터링(총 5건) 완료
 - 아동공동생활가정내 장애아동에 대한 정신의료기관 부당입원 등 인권침해 개선권고
 - 감염병 유행시기,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기본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
 - 정신장애인 인권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운영개선 정책권고
- (2022)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후속조치
- (2022)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강화
 - 독립보고서 작성 계획 보고(2월) 이후 독립보고서 작성 및 제출(7월), 국가 보고서 심의 참석 및 대응(8. 2. ~ 27.)
- (2022) 정신장애인 편견해소 및 사회통합 체계 구축
 - 정신장애인의 인권친화적 치료환경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,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 실태조사
 - 정신의료기관 부적절 자의입원 처리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및 개선 권고

⑤ 아동·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정립 및 법제도 개선

1. 아동인권모니터링 및 보고대회 [아동청소년인권과]

○ 아동인권 모니터링 사업 추진

- 아동인권 정책모니터링 사업: 아동인권현안, 아동권리협약의 권리영역별 국내 이행 현황을 전문가 포럼을 통해 모니터링(예시: 아동최선의 이익 분야 등)
- 아동인권 현장모니터링 사업: 특정 정책이나 제도의 적용실태를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모니터링(예시: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실태 등)
- 아동인권 당사자모니터링 사업: 아동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인권에 대해 모니터링

○ 아동인권 보고대회 개최

- 아동인권보고대회 개최를 통해 모니터링 사업 결과발표, 아동인권 현안대응 및 논의의 장 마련

2.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방안 마련 [아동청소년인권과]

○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

-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분리조치 과정, 분리조치 이후 시설 생활 사례, 분리조치 이후 원가정 보호원칙에 입각한 아동보호방안 분석
-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을 위한 법·제도·정책 등 개선방안 검토
- 아동의 분리보호 과정에서 「아동복지법」과 「아동학대 범죄 등에 관한 처벌법」간의 법적 미비 부분 개선방안 검토

○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 판단 가이드라인 제작

-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여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기준에 대한 검증 및 보완

-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에 대한 해설 내용을 담은 안내서 발간

○ 해외입양인 인권 개선방안 마련

- 해외입양인 인권상황 실태조사(2022) 결과를 반영하여 해외입양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제도의 취약성 분석
- 해외입양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및 헤이그협약 비준 관련 검토

3. 학생인권 개선 방안 마련 [아동청소년인권과]

○ 현장실습생 인권 개선방안 마련

-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방안 마련 실태조사(2022)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제도 관련 학생 인권 실태 분석
- 현장실습제도 관련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법·제도·정책 검토

○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개선방안 마련

- 초·중등학교 학교규칙 실태 및 인권침해 사례 분석
- 관련 국제인권기준 및 주요 국가의 학생인권 보장 제도 분석
-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토론회 개최

4. 취약 아동 인권 개선 방안 마련 [아동청소년인권과]

○ 보호대상아동의 탈시설 및 주거권 보장방안 마련

-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탈시설 및 주거권 실태 분석
- 보호대상아동의 탈시설 정책 수립방안 검토

○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체계 해외 선진사례 조사

- 아동보호치료시설 지원체계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관련 해외 선진사례 조사

5. 조약기구 대응 활동 강화 [아동청소년인권과]

○ 유엔 아동권리협약 정부보고서 심의 대응

- 협약 관련 관계기관 동향 파악 등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모니터링
- 아동권리협약 정부보고서(안) 모니터링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

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

- (2021) 아동인권모니터링 및 보고대회
 - 아동인권 모니터링(정책, 현장, 당사자) 사업 및 보고대회
- (2021) 코로나19 하에서 아동인권 보장 방안 마련
 -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보장 실태조사
- (2021)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방안 마련
 -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
- (2021) 아동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방안 마련
 - 제도개선 권고(안) 초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부처별 의견 조회
- (2022) 아동인권모니터링 및 보고대회
 - 아동인권 모니터링(정책, 현장, 당사자) 사업 및 보고대회
- (2022)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방안 마련
 -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
 -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 판단 관련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협의체 구성
 - 해외입양인 인권상황 실태조사
- (2022) 현장실습생 인권 개선 방안 마련
 -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 마련 실태조사
- (2022) 취약 아동 인권 개선 방안 마련
 -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

-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
- 코로나 19 등 사회재난 상황에서 아동인권개선방안 마련
-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예방과 보호방안 마련

참고 후속과제

- (2024) 아동인권모니터링 및 보고대회
- (2024) 보호대상아동의 탈시설 및 주거권 보장방안 마련
- (2024)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
- (2024) 아동양육시설 방문조사 및 거주아동 인권보장 방안 마련
- (2024) 유엔 제7차 아동권리협약 정부보고서 심의 대응

⑥ 형사사법절차의 인권친화적 개선

1.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보장방안 마련 [인권정책과]

○ 수사 절차에서의 사회적 약자 보호

- 수사 현장에서의 인권 문제 관련 선행 연구 자료 검토
- 간담회 등을 통한 개선방안 검토

○ 피조사자의 기본권 행사 보장을 위한 조사 환경 개선 방안 연구

- 현재 각 경찰관서에서 운영 중인 조사실 환경에 대한 분석 및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유형, 보장 방안에 대한 검토
- 해외 주요 국가 수사기관의 조사실 형태 및 운영 규정 분석

○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한 형집행법 개정안 검토

-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및 처우 개선방안 연구(2022년) 결과를 토대로 수용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주요 과제 선정
- 주요 개정 사항을 반영한 체계적인 형집행법 개정안 검토

2. 집회와 시위 관련 제도개선 [조사총괄과]

○ 집회와 시위 관련 제도개선

- 국회 집시법 개정안, 현재의 집시법 관련 주요 위헌법률심판 사건 검토
-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나오는 혐오표현과 특정인에게 위협과 공포를 가하는 표현, 소음기준 등 관련 정책제도개선 검토, 토론회 개최
- 현장 모니터링 및 인권지킴이 활동

○ 집회 등 인권현안 모니터링 통한 신속한 현장 대응

- 인권침해 상황이 우려되는 집회나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통한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한 현장 대응

참고 **관리과제 추진 실적**

- (2021) 수사절차 및 관행에서의 인권보장 강화
 - 「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참여권 보호 강화에 대한 권고」 상임위 상정
 - 「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압수·수색 절차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개선 권고」 상임위 상정
- (2021)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방안 마련
- (2021) 형사절차 관련 위원회 권고이행 모니터링
 - 유치인 의료 처우, 경찰청 운용차량 내 영상녹화장비, 구속 피의자의 비변호인 접견 제한 시 불복절차 등 통지, 바디캠 사용 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등 수사 분야 권고 이행 모니터링(9. 8. ~ 12. 24.)
- (2022)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
 -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관련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 공동세미나(9. 28.)
- (2022) 수사기관 관련 위원회 권고이행 모니터링
 - 신상공개 관련 방어권 보장, 불송치 결정 시 알권리 보장, 신뢰관계인 동석 관련 방어권 보장 등 수사 분야 권고 이행 모니터링(9. 8. ~ 10. 7.)

7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대응과 국제협력 강화

1. 국제인권제도 심의 및 국제인권정책 대응 강화 [인권정책과, 사회인권과, 국제인권과]

○ 유엔 자유권위원회 심의 대응을 통한 인권 증진

- 위원회 독립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, 단체 의견수렴 및 독립보고서 작성·제출(국가보고서 심의 약 1개월 전)
- 유엔 자유권위원회 위원 대상 현지 브리핑(1~2일 전 또는 심의 당일) 및 심의 모니터링
-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(주요 권고 및 우려 사항)에 관한 토론회 또는 간담회 등 개최

○ 고문방지협약 독립보고서 제출

- 고문방지위원회(CAT)의 본심의회의 일정에 맞추어 주제 별로 쟁점 목록에 따른 정부 답변사항 검토
-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수렴

○ 유엔 사회권규약 제5차 심의 대응

- 유엔 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이행상황 점검
- 제5차 국가보고서(안)에 대한 검토 및 쟁점목록 제출 등

○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(UPR) 심의 대응을 통한 인권 증진

- 제4차 UPR 실무그룹 회의(2023. 1 ~ 2. 예정) 모니터링
- 제4차 UPR 심의 결과보고서 채택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원회 성명 발표
- 제4차 UPR 권고 이행을 위한 토론회, 유관기관·단체 간담회 개최

○ 유엔노인권리협약 성안 추진 모니터링

- GANHRI의 노인권리협약 초안 작성 작업 참여
- 유엔 노인권리협약 초안 성안 관련 기관 및 단체 협력
- 유엔 노인권리협약 초안 성안 과정 모니터링

○ 위원회 국제인권정책 지원 체계 구축

- 위원회 내 당해연도 국제업무 추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(컨트롤 타워) 역할 강화
- 국제업무 유관부서 간담회 개최 및 유엔 조약기구 관련 정보 전달 등 유관 부서 지원(수시)
- 2023년 위원회 국제업무 추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결과 보고

2.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제고 [국제인권과]

○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가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

- 우리나라가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요 국제인권조약 및 선택의정서에 대한 가입·비준 촉진
- 관련 인권단체, 유관 학회 등 공동 협력하여 미가입 주요 인권조약 가입·비준을 위한 토론회 개최

○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확산

- 국제·지역(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등) 인권규범, 유엔인권기구(인권이사회, 총회·제3위원회, 경제사회이사회 등), 유엔조약기구, 국가인권기구 관련 자료를 수집·번역·배포
- 위원회 업무(정책, 조사, 교육, 홍보 등) 추진을 위해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외국어 문헌·자료를 해당 부서가 번역 후 활용 및 공유

○ 국제인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

- 국제인권조약기구 심의 차수별·절차별 자료 게시 및 검색 시스템 개발

- 국제인권 정책 및 판례(국·영문) 수집·분류·게시 및 검색 시스템 개발

3. GANHRI 및 국가인권기구 교류·협력 [국제인권과]

○ GANHRI 교류·협력을 통한 인권 증진

- GANHRI 집행이사회 참석 및 GANHRI 내 주요 사안에 대하여 아·태지역 의견 반영
- GANHRI 연례회의 참석 등을 통한 역할 제고
- GANHRI 주요 인권 논의의 국내 확산 도모
- 유엔기구, 시민사회단체, 국가인권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 도모

○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운영을 통한 노인인권 의제 선도

- 제13차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 등 국제회의 참석
-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 개최(연 2회)

4. APF 교류·협력 및 APF 의장 업무 수행 [국제인권과]

○ APF와 교류·협력을 통한 인권 증진

- APF 연례회의·거버넌스위원회 회의 참석 및 주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위원회 리더십 및 인권 현안 대응 강화
- APF 사무총장 회의, 인권 현안 대응 회의, 역량강화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APF 회원기구 간 협력 강화 및 APF 인권 의제 선도
- APF 의장으로서 지역 간 인권 네트워크 회의, 유엔 회의 등에서 국제사회 인권논의 주도
- 아태지역 인권 현안 적극 대응

○ APF 국가인권기구 초청 연수 프로그램 운영

- APF 소속 국가인권기구 직원 대상 초청 연수 프로그램 운영

- 위원회 주요 활동 및 성과 홍보, 국제인권현안을 고려한 주제를 선정, 인권 기구간 경험 공유 및 교류·협력 네트워크 구축
- 위원회 직원의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인권 현안 능력 배양

5. 국제인권 현안 대응 [국제인권과]

○ 인권현안 대응 국제 콘퍼런스 개최

- 인권현안 대응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콘퍼런스 개최
- 국내외 주요 인권기구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 도모

○ 국제인권동향 및 온라인 영문 뉴스레터 제작·배포

- 유엔 등 국제기구의 주요 인권의제, 국제회의, 국가인권기구 및 NGO 활동을 소개하는 국제인권동향 작성 및 배포
- 위원회 주요 권고 및 행사를 소개하는 영문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

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

- (2021) 유엔인권조약기구 및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(UPR) 심의 대응
 -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
 - 제3차 UPR 권고 이행에 관한 정부의 중간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 제시
- (2021)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제고
 -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쟁점 간담회 개최
 -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 쟁점 간담회 개최
- (2021) 국제 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인권연대 강화
 - GANHRI 승인소위의 국가인권기구 등급심사에서 A등급 유지
 - GANHRI 노인인권 실무그룹 의장으로 재선출, 실무그룹 상/하반기 회의 개최
- (2021) 국제인권자료의 배포 및 확산을 통한 국제역량 강화

- 유엔인권조약기구 40년간 정부대상 권고 등을 심의 차수별로 정리하여 홈페이지 게시
- GANHRI 승인소위의 국가인권기구 등급심사에서 A등급 유지
- (2022)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제고
 - 유엔인권조약기구 개인통보제도 이행을 위한 간담회, 헌법재판의 국제인권 기준 적용 토론회 개최
- (2022)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(UPR) 심의 대응
 - 제4차 대한민국 UPR 심사 관련 인권위 독립보고서 유엔에 제출
 - UPR INFO 사전세션에 참석(발표)하여 우리나라 주요 인권과제 제시
- (2022) 국제인권기구, GANHRI, APF 교류·협력
 - 제27차 APF 연례회의에서 APF 의장으로 선출되어 의장 수임(2022~2024)
 - GANHRI 노인인권 실무그룹 상/하반기 회의 개최하여 국제적으로 노인 인권 의제 선도
- (2022) 국제인권 현안 대응
 - 유엔노인권리협약 초안 마련을 위한 실무그룹 및 자문위원회 운영
 - 유엔노인권리협약 마련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개최

참고 **후속과제**

- (2024) 유엔 사회권규약 제5차 심의 대응 및 후속조치
- (2024)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방안에 대한 정책검토
- (2024) APF 의장 수임을 통한 아태지역 인권현안 대응 강화
- (2024) 정부의 제5차 자유권규약 최종견해 권고 이행 현황 모니터링
- (2024) 정부의 제4차 UPR 권고 이행 현황 모니터링
- (2024) 유엔 노인인권리협약 초안 성안 관련 모니터링 계속 추진
- (2025) 정부의 ‘제4차 UPR 권고 이행 점검 중간보고서’ 제출 촉진

■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

번호	성과목표	관리과제
1	조사구제 활동의 신속성, 실효성, 전문성 강화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진정사건 조사 2. 진정접수·민원처리 개선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3. 공감·경청을 기본으로 하는 상담전문성 강화 4. 조정제도 활성화로 권리구제 효과제고 5. 조사 역량 강화 활동 6. 조사절차의 개선 및 정비 7. 기획조사 강화
2	생애주기별 인권교육 확대와 인권문화 확산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인권교육 확대·강화를 위한 제도 및 환경 조성 2. 인권교육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3. 관련 기관단체 교류협력 강화 4. 인권강사 양성 및 활용기반 조성 5. 사이버인권교육센터 운영 및 콘텐츠 개발보급 6. 지역 인권교육 활동 7. 인권도서관 운영 및 이용자 서비스 제공 8. 인권콘텐츠 개발보급 통한 인권문화 확산 9.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언론 홍보 강화 10. 지역 홍보 활동
3	교류협력 내실화와 인권거버넌스 강화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인권·시민사회단체 교류 협력 강화 2. 다수인보호시설 인권보장 협력체계 강화 3. 장애인 인권단체 공동 토론회 등 협력 강화 4.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단체협력 사업 강화 5. 지역 교류협력 활동

4	지역인권보장체계 및 인권사무소역량 강화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역인권제도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2. 협력과 지원을 통한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3. 인권교육을 통한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4. 지역별 인권보장체계 강화 활동
5	군인권 보호·증진 체계 강화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군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기능 강화 2. 방문조사 활성화·내실화를 통한 인권침해 사전예방 3. 군 사망사건 신속대응 체계 구축 및 군인권 현안 적극 점검·대응 4. 군 성차별·성폭력 등 사건조사 및 권고 이행 모니터링 5. 군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군 인권교육 및 홍보 강화 6. 군 인권 국내외 협력 활성화 7. 효과적인 군인권 업무 지원체계 구축
6	체계적 인권진단과 평가제도 마련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발간 2. 국가인권통계 시스템 구축 및 관리 3. 권고·의견표명 이행실태 확인·점검
7	위원회 전문성 제고와 독립성 강화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회 업무 기획 및 총괄 2. 위원회 성과 관리 3. 능동적 조직체계 구축 4. 전략적 자원배분과 효율적 예산 관리 5. 대국회 업무 및 인권현안 활동 지원 6. 안정적인 법무서비스 제공 7. 체계적 감사를 통한 투명성 제고, 공직기강 확립 8. 기록물 평가기준 정비 및 정보공개의 적정성 제고 9.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10.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11. e-진정시스템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 12. 노후 H/W, S/W 교체 및 정보보호 강화 13. 인권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 14. 조직 역량강화 및 성과제고를 위한 인사관리 15. 활력있는 직장문화 조성 및 복지 향상 16. 위원회 의사업무의 안정적 운영 17. 청사 및 보안업무의 체계적·효율적 관리 18. 세입·세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

① 조사구제 활동의 신속성, 실효성, 전문성 강화

1. 진정사건 조사 [조사부서 공통]

○ 진정사건 조사

- 신속한 조사를 통해 장기사건 최소화 및 진정인 만족도 제고
- 현장조사 강화, 공동조사관제 등 운영, 인용사건의 사후 관리 기능 강화
- 외부전문가 자문 활용 등 조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효적인 진정사건 조사를 통해 위원회의 권리구제 활동을 충실히 수행
- 긴급구제 요청사건 등 현안사건 적극적이고 합리적 대응 및 권고 외 의견 표명, 조정, 합의종결, 조사중해결 등 다양한 권리구제방안을 활용하여 권리구제 극대화

2. 진정접수·민원처리 개선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[인권상담조정센터, 인권사무소]

○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효율화 방안

- 국민신문고 유입 민원 유형 및 문제점 분석
-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부서 및 위원회 관련 부서 간담회 개최
- 기관별 민원 시스템 및 실제 운영 파악 통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간소화 방안 모색

○ 진정권 보호를 위한 진정함 관리실태 점검

- 관할지역 내 구급·다수인보호시설 진정함 설치 및 관리상황 점검

3. 공감·경청을 기본으로 하는 상담전문성 강화 [인권상담조정센터]

○ 전화상담시스템 안정화 및 상담접근성 강화 시스템구축

- 구축된 전화상담 시스템 안정화
- 새로운 정보환경에 부응하는 상담 시스템 체계 마련

○ 인권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토대 마련

- 다양한 위원회 상담사례 등을 유형화시키고 그에 대한 모범답안(결정례 등 참조) 마련
- 특이 민원인에 대한 대응방안(대응 매뉴얼)과 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

○ 인권상담사의 전문성 제고 등

- 전화상담, 접수대 근무, 대면상담 시 특이 민원인 대응 교육 실시(대응메뉴얼 교육)
- 상담역량 강화교육 실시(유형화된 상담사례 내용 및 활용방안 집중 교육)
- 수어 상담, 다국어 상담의 원활한 운영방안 마련
- 전문상담위원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혹은 대안 마련

○ 인권순회상담 및 인권현장대응 강화

-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의 위원회 접근기회 확대
- 사회적 이슈 또는 주요 인권현안문제 발생현장 방문으로 인권 현안문제 파악, 위원회 대응방안 모색 등

4. 조정제도 활성화로 권리구제 효과 제고 [인권상담조정센터]

○ 조정제도 활성화

- 진정시스템상의 조정사건 처리방안 현실화
- 조정사건 현황 분석
- 조정제도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

- 조정사례 발굴을 위한 조사부서 간담회 및 업무협의
- 조정제도 홍보 및 안내 강화
- 소위원장 직권조정 활성화 및 조정제도 정비

5. 조사 역량 강화 활동 [조사부서 공통]

○ 조사관련 자료 확충

- 전문적 연구용역, 해외 주요 결정례 번역 등을 통해 각 영역 조사 전문성 강화

○ 조사관 전문역량 강화

- 팀학습, 조사연구 워크숍, 조사관 교육, 멘토링 등 부서 차원 진정 사건 관련 사례 공유 및 정기적인 논의 창구 마련을 통하여 조사방법, 위원회 판단기준, 사건처리 방향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한 조사 역량 강화
- 모범 조사결과보고서, 모범 결정문 등 공유 및 활용

6. 조사절차의 개선 및 정비 [조사총괄과, 기획조사팀, 성차별시정과]

○ 조사구제규칙 전부개정 이후 제도정비

- 조사구제 관련 제도정비(직권조사 훈령 마련 등)
- 검찰·경찰·법원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유형별 결정요지 마련
- 2020년 e-진정처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검경분야 사건조사 매뉴얼 수정

○ 진정사건 처리 매뉴얼 작성 및 관련기관 권리구제기관 간담회

- 사회적 관심이 높은 괴롭힘 사건 등 진정사건 침해사례집 발간을 통한 인식 개선
- 진정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매뉴얼 작성

○ 성희롱 및 성희롱 2차 피해 조사를 위한 매뉴얼 발간

- 실제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과 전문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성희롱 및 성희롱 2차 피해의 쟁점을 정리하고, 조사방법, 조사보고서 및 결정문 작성 방법을 정리한 성희롱 진정사건 조사 매뉴얼 발간

7. 기획조사 강화 [조사부서]

○ 방문조사 강화 (조사부서)

- 노인복지시설, 갱생보호시설, 한부모가족보호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(기획조사팀),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(조사총괄과), 교정시설(인권침해조사과), 외국인보호시설(인권침해조사과), 소년원(아동청소년인권과), 정신건강증진시설(장애차별조사2과) 등 각 부서 소관 방문조사 실시
- ※ 군부대 및 군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는 관리과제 3-5-2(방문조사 활성화-내실화를 통한 인권침해 사전예방)로 추진

○ 방문조사 관련 규칙 및 매뉴얼 정비 (기획조사팀)

- 방문조사 대상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조사범위 정비
- 다수인보호시설 조사대상 유형별(노인, 노숙인, 갱생보호 대상 시설 등) 방문조사 매뉴얼(실무편람) 작성

○ 직권조사 강화 및 확대 (조사부서)

- 상시적인 직권조사 사안 발굴 및 적극 추진

참고 **관리과제 추진 실적**

- (2021) 진정사건 조사
- (2021) 진정접수·민원 절차개선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
 - 진정접수 경로별 실효성 분석 보고

- (2021) 공감·경청을 기본으로 하는 상담전문성 강화
- (2021)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초조사
 - 위원회 전체 2021년 종결사건(9,287건)중 781건(8.4%) 기초조사 처리
- (2021) 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한 구제효과 제고
- (2021) 조사 역량 강화 활동
- (2021) 기획조사 강화
 - 다수인보호시설 방문조사 매뉴얼 작성 및 방문조사 중점 점검사항 마련
- (2022) 진정사건 조사
- (2022) 진정접수·민원처리 개선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
 - 취약계층 온라인 진정접수 접근성 강화 방안 및 민원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원회신 표준안 마련
- (2022) 공감·경청을 기본으로 하는 상담전문성 강화
- (2022) 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한 구제효과 제고
 -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
- (2022)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초조사
- (2022) 조사 역량 강화 활동
 - 조사관 토론회, 조사관 역량강화 교육 등
- (2022) 조사절차의 개선 및 정비
 - 조사구제규칙 전부개정 및 훈령 제정(7. 1.), 조사구제 매뉴얼 마련(11월), 유형별 판단기준 쟁점정리(검경중심으로)(11월)
 - 특이사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매뉴얼 마련 및 시행(7. 1.), e진정시스템 ‘조사참고사례’ 게시판 마련(4월)
 - 직장내 괴롭힘 유형 진정사건 처리 실무매뉴얼 마련
- (2022) 기획조사 강화
 - 방문조사 실시 및 권고

② 생애주기별 인권교육 확대와 인권문화 확산

1. 인권교육 확대·강화를 위한 제도 및 환경 조성 [인권교육기획과, 인권교육운영과]

○ 인권전문가 양성의 허브, 인권교육원 설립 추진

- 인권교육원 설립(리모델링 증축)을 위한 공사관리
- 현장 지도 감독, 공정별 시공상세도 작성·검토 확인
-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 및 협의(→기획재정부)
- 공사계약 및 착공, 2024년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제출
- 착공식을 통한 설립 본격화 홍보, 관련기관 및 주민 협력 계기 마련
- 인권교육원에 적용할 프로그램과 함께, 전 교육과정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고, 사회 각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인권교육 기본교재 개발
- 인권교육원 운영 프로그램(공공·학교·시민) 및 활용 교재(공공·학교·시민) 개발 지속 추진
- 인권교육원 설계, 공사,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, 공간활용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립 추진

○ 대학인권센터 전문성 및 역할 강화 지원

- 대학인권센터 설치 의무화(2022. 3. 24. 시행)에 따라, 대학인권센터 설치·운영 내실화를 위한 협력 강화
- 대학인권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(전국), 대학인권센터 인권역량 향상 연수 과정, 대학인권센터 인권침해 사건 사례 연구모임 운영(수도권·강원 지역)
- 제5차 대학인권센터협의회, 수도권·강원 지역 대학인권센터협의회 운영
- 교육부의 대학인권센터 선도모델 시범사업 운영 협력

○ 교육과정을 통한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지원

- 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·고시(2022. 12.)에 따라,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을 위한 인권 관점 적용 원칙 마련
-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
- ‘기후위기와 인권’에 관한 인권교육 실천 연구모임, ‘놀이로 배우는 인권’ 전국 초등교사 인권교육 실천 연구모임 2기 운영

○ 예비교원 대상 인권교육 실태조사

- 교대 및 사범대 등 교원양성과정에서의 예비 교원 대상 인권교육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
-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 교원 대상 인권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제도 개선 방안 도출

○ 노인 인권 강화를 위한 교육제도개선

-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서의 중장년 및 노인의 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평생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검토
- 노인 인권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현황조사, 평생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

○ 인권체험관 종합 발전 계획 수립

- 2022년 ‘인권체험관 종합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’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체험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‘인권체험관 종합 발전 계획 수립’
- 인권체험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및 콘텐츠 운용

2. 인권교육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[인권교육기획과, 인권교육운영과]

○ 활용성 높은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

- 인권의 가치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,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의성·활용성 있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인권교육 전문성, 대중성 강화

○ 공공·학교·시민·사회분야 인권교육 운영 및 전문성 제고

- 국가 공무원 대상 전문교육과정 운영
- 국회, 지방의회 등 입법 관계자 대상 전문교육과정 운영
- 경찰, 법무 관계자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지원 강화
- 초·중등 학교관리자 및 교사 전문교육과정 운영
- 교과서 개발·집필 담당자 인권감수성과정 운영
- 사회복지영역 인권담당, 인권리더쉽, 교육전문가 등 대상별 인권감수성 등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의무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
- 기업 인권담당, 이주분야 상담 및 활동가 등 대상별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선원 등 인권교육 의무화 시행(2023. 1.)에 따른 인권교육과정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으로 인권교육 조기 정착 기반조성
- 진정사건의 권고, 조정 및 합의종결에 따른 이행조치의 일환으로 조사부서에서 요청한 특별인권교육 실시
- 피진정인에게 인권학습 및 훈련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재발 방지 도모

○ 노인분야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

-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과 노인인권교육 모델발굴을 위한 시범교육
- 노인 인권교육기관 강사 대상 보수교육 기획 및 운영

○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정책리더십 과정

- 아동인권 정책 수립 시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아동인권영향평가제도 관련 교육이 미흡함에 따라 관련한 내용을 강화한 교육을 기획·운영
- 아동인권영향평가제도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아동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정책 리더십과정(아동인권영향평가제도 포함) 기획·운영

○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인권교육 기반 조성

- 간호사, 요양보호사, 간병인 등 돌봄 노동이 저평가된 사회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추진
- 사회서비스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, 사회서비스 노동인권 교육 기획 및 운영

3. 관련 기관단체 교류협력 강화 [인권교육기획과]

○ 국내외 교류 협력 활성화

- 학교인권교육협의회, 대학인권센터협의회 온라인 소통체계 활성화 및 업무 과제 중심의 직무역량 강화
- 경찰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외부전문가 참여 인권교육 협력체계 구축 지원
- 인권교육 의무화 법률 소관 국가기관 대상 인권교육협의 및 협력체계 구축 기반 마련
- 노인인권교육 시범연구를 위한 인권교육 교류협력
-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아동·노인 인권교육 워크숍
- 아동·노인분야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진 구축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
- 한국인권교육포럼 운영, 인권교육전문위원회 운영
- 국제인권교육 콘퍼런스 참석

4. 인권강사 양성 및 활용기반 조성 [인권교육운영과]

○ 인권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

- 교육대상 및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, 인권전문성을 갖춘 인권강사 양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 운영
- 신규 인권강사 양성과정(기본, 전문, 심화과정), 위촉 인권강사에 대한 역량 강화과정 운영
- 인권강사 맞춤형 역량 향상 컨설팅 확대 운영

○ 인권강사 활용 및 기반조성

- ‘인권강사’ 및 ‘인권강사양성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사회전반 인권강사의 수준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연구, 양성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시행
- 인권강사 강의현황, 인권강사 위촉 및 관리 및 인권강사 양성기관 협력체계 구축
-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 실태조사 연구

5.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운영 및 콘텐츠 개발·보급 [인권교육운영과]

○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체계 품질향상

- 인권교육원 설립을 앞두고 교육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운영 체계의 물리적, 전산적, 제도적 개선으로 사이버 인권교육 활성화
- 콘텐츠 공동활용의 절차를 재정비하여 체계적인 학습기관 관리
- 중장기적 계획에 기반한 학습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해 교육운영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, 향후 인권교육원 학습관리시스템 구축을 고려하여 필요기능 시범 도입

○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보급을 통한 인권의식 확산

-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품질향상
- 다양한 신규 콘텐츠 제작

6. 지역 인권교육 활동 [인권사무소]

○ 지역 인권교육 활동

- 공공, 학교, 시민사회, 공무원, 교원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분야별·대상별 인권교육
- 인권강사 역량 강화과정 운영을 통한 역량 제고

○ 인권체험관 운영 활성화

- 지역주민에 대한 인권체험 프로그램 운영
- 다양한 인권콘텐츠 개발 및 전시·활용을 통한 인권감수성 및 인권의식 향상 도모

7. 인권도서관 운영 및 이용자 서비스 제공 [인권교육기획과]

○ 인권도서관 운영 및 장서관리

- 장서개발계획 및 단행본·비도서, 연속간행물, Web-DB 등 자료유형별 구매·구독 계획 수립, 자료 조사, 구입, 자료관리시스템 DB 구축 등 장서관리
-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
- 위원회 간행물 발간 현황 관리와 정보 제공
-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근거한 자료회원(분관 포함) 대상 개인정보 재동의 시행 계획 수립 및 실시

○ 인권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제공

- 인권도서관 정보서비스 운영
- 인권영화상영회 운영 및 인권도서관 견학프로그램 운영
- 인권자료 디지털 큐레이션

8. 인권콘텐츠 개발·보급 통한 인권문화 확산 [홍보협력과]

○ 일상에서의 인권문화 보급을 위한 웹드라마 제작

-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문제를 위원회 결정 등과 연계하여 콘텐츠 제작: 2023 웹드라마 시행사업자 선정, 기획, 제작 및 보급
- 기 제작 웹드라마 평가, 제작방식 검토 및 2022 웹드라마 보급

○ 장애 접근권 향상을 위한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

- 화면 해설 음성과 자막 등을 제공하여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인권문화 콘텐츠를 어려움 없이 접할 수 있도록 제작·보급
-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기획·계획 수립,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시행대상자 선정 및 배리어프리 영화 보급

○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인권 캠페인

- 인권정책·정보를 단순 전달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형식과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추진
- 인권정책 홍보 및 주요 인권이슈 캠페인 추진
- 위원회 주요 활동 관련 홍보콘텐츠 기획, 제작
- 유튜브, 관련 홈페이지, 라디오, TV 캠페인 제작 및 보급

○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인권홍보 활성화

- 내·외부 전문가와 인권지 평가 및 기획
- 격월간 인권지·웹진 발행,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포
- 결정레 영상 기획, 제작 보급
- 매월 뉴스레터 발행 및 뉴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홍보

○ 인권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인권공모전

-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분야를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
- 공모분야 선정 및 공모전 홍보 강화, 수상작 시상 및 활용

○ 인권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통한 인권 가치 확산

- 세계인권선언 제75주년에 따라 유엔의 캠페인과 결합, 위원회 차원에서 전달할 행사의 메시지를 선정하여 슬로건으로 홍보
- 대한민국인권상 시상 등 기념식 계획 수립 및 진행
- 인권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다양한 공연과 행사 추진

9.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언론 홍보 강화 [홍보협력과]

○ 언론홍보 내실화를 통한 인권의식 증진

- 보도자료 배포 및 취재지원
- 기획성 기사, 내·외부 전문가 인터뷰, 기고 등 기획, 주요 권고에 대한 브리핑, 기자 간담회
- 인권 관련 기사 스크랩, 주 단위 언론 모니터링 보고
- 인권보도상 선정 및 시상
- 2023년 주요 인권 현안 모니터링 및 인권보도 참고사례집 발간 검토

10. 지역 홍보 활동 [인권사무소]

○ 지역 홍보 활동

- 캠페인, 지역 내 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
-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, 간담회 등을 통한 인권가치 확산

참고

관리과제 추진 실적

- (2021) 인권교육 확대·강화를 위한 제도 및 환경 조성
 - 2022년도 국유재산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 예산확보(2,946백만원), 설계 공모(9. 14. ~ 11. 3.), 기본설계 완료
 -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제도개선 권고(8. 19. 상임위 의결)
 - 인권교육 현황 실태조사 추진(4건: 국회, 광역지자체, 초중등 교원, 아동 학대 예방 부모대상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)
- (2021) 인권교육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
 - 인권교육 과정운영안내서 및 인권교육용 결정사례집 제작 배포
- (2021) 인권교육 체계화·전문화를 위한 교류 협력 강화
- (2021) 인권강사 양성 및 활용 기반 조성
 - 인권강사양성과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(8. ~ 12.) 및 활용

- (2021) 사이버인권교육센터 운영 및 콘텐츠 개발·보급
 - 사이버교육 콘텐츠 팩트북 및 온라인 인권교육 가이드북 교재 개발 배포
- (2021) 지역 인권교육 활동
- (2021) 인권도서관 운영 및 정보서비스 강화
 - 인권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(3. 17. ~ 8. 16.)
- (2021) 인권콘텐츠 개발·보급 통한 인권문화 확산
 - 정신장애인 인권 주제 EBS ‘지식채널e’ 공동 캠페인, 다양한 가족형태 주제 ‘다양성 존중’ 캠페인, 혐오표현 대응 캠페인 실시
 - 웹드라마 ‘티밍’, 결정체 영상(청소년 인권, 정신장애인) 제작 및 보급
 - 인권작품공모전 선정
- (2021) 언론 홍보 강화
 - 위원회 20주년 계기 언론 기획보도 및 제10회 인권보도상 시상
- (2021) 지역 홍보 활동
- (2022) 인권교육 확대·강화를 위한 제도 및 환경 조성
 - 인권교육원 총사업비조정(1차)총사업비조정[당초: 9,590백만원→11,857백만원(증 2,267백만원, 23.6%)], (2차) 총사업비 조정(옹벽철거를 위한 토목공사비 1,100백만원, 35.1%) /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의결(6. 23.)
 -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(8. 11.)
 - 국회 인권교육 강화,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, 초·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, 아동 인권교육 강화 등 정책검토
 - 인권체험관 종합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,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추진
- (2022) 인권교육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
 - 인권교육 과정운영 안내서 제작 배포
- (2022) 관련 기관단체 교류협력 강화
 - 교육부 대학인권센터 선도모델 개발 시범사업 지원(3. 24. ~ 25. 전국 7개

대학 선정 및 컨설팅 추진, 9. 15. 컨설팅 회의)

- (2022) 인권강사 양성 및 활용 기반 조성
 - 인권강사 1:1 맞춤형 역량향상 컨설팅, 강사용 워크북 제작 배포
- (2022) 시민·사회영역 대상별 인권교육 운영 및 전문성 제고
- (2022) 사이버인권교육센터 운영 및 콘텐츠 개발·보급
 - 사이버교육 이수 전자증명 보안솔루션 도입
 -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이버인권교육콘텐츠 13종 개발
- (2022) 지역 인권교육 활동
- (2022) 인권도서관 운영 및 정보서비스 강화
- (2022) 인권콘텐츠 개발·보급 통한 인권문화 확산
 - 군인권보호관 출범 기획 홍보 및 평등법 주제 MBC ‘다큐프라임’ 공동 캠페인 등 진행, ‘기후위기와 인권’ 캠페인(아트월 제작, 전시)
 - 웹드라마, 결정레 영상 제작 및 보급
 - 인권작품공모전 선정 등
- (2022)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언론 홍보 강화
 - 군인권보호관 출범 기획 보도 추진
 - 제11회 인권보도상 시상 및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 제작
- (2022) 지역 홍보 활동

참고 후속과제

- (2024) 유연한 교육 형태와 온라인 검색에 의한 학습 경험 추세에 맞는 학습 관리시스템 개편
- (2025) 학습관리시스템 개편 성과 모니터링

③ 교류협력 내실화와 인권거버넌스 강화

1. 인권·시민사회단체 교류 협력 강화 [홍보협력과]

○ 인권시민사회단체 정례적·일상적 협력 강화

- 인권현안 및 협력 관련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수시 개최
- 인권현장 방문: 관련 부서 및 인권사무소 유기적 협력을 통해 추진
- 인권시민사회단체 요청 검토 및 지원, 인권시민사회단체 배움터 사용 지원

○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내실화

- 시민사회단체의 인권보호·증진 활동 지원을 통한 민간영역의 인권옹호 역량 강화 및 인권문화의 저변 확대
-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인권옹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

2. 다수인보호시설 인권보장 협력체계 강화 [기획조사팀]

○ 사회복지시설 인권포럼 운영

- 방문조사 대상 시설 협력체계 마련(실무회의체로 운영 검토)
- 다수인시설 방문조사 결과 공유, 향후 방문조사 방향 논의
- 국제인권기준 및 동향 소개·전파, 시설 인권문제 소통의 장 마련

○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체계 구축

- 노인복지시설 시설생활인 인권상황 점검을 위한 외부 민간기관 등 협력
-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인권옹호자 역량 강화
- 방문조사 중점점검사항 등 인권제도 개선과제 발굴

3. 장애인 인권단체 공동 토론회 등 협력 강화 [장애차별조사1과]

○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개최

- <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>을 기본 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되, 인권사무소는 지역 현안이 있는 경우 현안을 중심으로 추진

○ 장애인권 단체 협력 강화

- 현안 발생 시 공동 대응 등 협력 강화
-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(2023 ~ 2027)과 연계한 과제 발굴 등 협력
- 현장 방문, 간담회, 토론회, 현장 모니터링 등 실시

4.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단체협력 사업 강화 [장애차별조사2과]

○ 장애인 인권옹호 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

- 장애인 권리보호 기관과 정보공유 및 소통강화를 위한 토론회 등 관련분야 이해관계자가 심층 논의 자리 마련
- 장애인 권리보호 기관과 협력사업 발굴

5. 지역 교류협력 활동 [인권사무소]

○ 지역 교류협력 활동

- 시민사회, 권리보호기관과의 협력 활성화

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

- (2021) 인권·시민사회단체 교류 협력 강화
 - 상·하반기 단체간담회 개최
- (2021) 권리보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

- 「사회복지시설 인권포럼」 구성 및 개최
- (2021) 장애인 인권단체 공동 토론회 등 협력 강화
- (2021) 장애인 인권기관과의 협력사업 강화
- (2021) 지역 교류협력 활동
- (2022) 인권·시민사회단체 교류 협력 강화
 - 상·하반기 단체간담회
- (2022) 권리보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
 - 「사회복지시설 인권포럼」 개최
 - 인권침해사례집 발간 및 유엔 노인인권전문관 보고자료, 등 번역
 - 시설종사자 인권역량 강화 워크숍(모니터링 결과 발표회)
 - 장애인거주시설 방문조사 권고사항 알기 쉬운 결정문 제작 배포
- (2022) 장애인 인권단체 공동 토론회 등 협력 강화
- (2022)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단체협력 사업 강화
- (2022) 지역 교류협력 활동

참고 후속과제

- (2025)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(3차) 대응

④ 지역인권보장체계 및 인권사무소역량 강화

1. 지역인권제도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[인권정책과]

○ 지역인권제도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

- 지자체에서 인권보장과 효과적인 인권제도의 운영을 위한 대안 등을 마련 하여 보급
- 인권정책영향평가 측정 방법·지표 및 인권기본조례 개정 표준안 개발
- 인권정책기본법 입법 모니터링 및 입법 후 후속조치

2. 협력과 지원을 통한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[홍보협력과]

○ 인권옹호자회의를 통한 교류·협력 강화

- 각 지역에서 인권옹호활동을 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인권 현안 공유 및 협력 기반 강화
-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인권사무소와의 유기적 협력 추진

○ 인권단체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지역인권포럼(가칭) 운영

- 지역 인권 현안 및 인권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공유하며 위원회 업무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례적 포럼 운영

○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지원으로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

- 지자체 관련 부서와 인권사무소 협의 진행 및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수요 파악
-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계획 및 예산 등 지원 및 지자체 요청에 대한 지원

3. 인권교육을 통한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[인권교육운영과]

○ 인권교육을 통한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

- 지방자치단체 관계자(인권위원, 인권보호관, 공무원, 지방의회의원 등)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인권리더십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
- 광역지방자치단체인권교육협의회 온라인 소통체계 활성화 및 업무과제 중심의 직무역량 강화

4. 지역별 인권보장체계 강화 활동 [인권사무소]

○ 지역별 인권보장체계 강화 활동

- 인권조례 이행 및 인권정책 실행 강화 위한 협의체 운영
- 지역인권기구와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인권현안 공유 및 대응, 공동협력사업 추진

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

- (2021) 지자체 인권행정 매뉴얼 마련
 - 지자체 인권정책 안내서 발간
- (2021) 협력과 지원을 통한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
 - 인권옹호자 회의 개최 및 지역인권전문위원회 구성·운영
 - 지자체와 인권사무소와의 협력 지원사업 실시(부산, 광주인권사무소)
- (2021) 지역별 인권보장체계 강화 활동
 - 지자체 인권제도 기반 구축 토론회
- (2022) 지자체 인권 기반 제도화 구축
 -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및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, 인권정책영향평가 등의 방법 및 지표개발 연구
- (2022) 협력과 지원을 통한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
 - 인권옹호자 회의 개최 및 지역인권전문위원회 운영(3회)
 - 지자체와 인권사무소와의 협력 지원사업 실시(부산, 대전인권사무소)
- (2022) 지역별 인권보장체계 강화 활동

⑤ 군인권 보호·증진 체계 강화

1. 군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기능 강화 [군인권보호총괄과]

○ 군 장병 급식 환경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

- 군 급식 환경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장병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

○ 군사망·부상사고 등 발생 시 장병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

- 군 사망·부상사고 등 발생 시 현행 보상·지원절차의 현황, 문제점 등 국방부 (각 군 포함)의 최근 개선실태 파악, 전문가 의견수렴 등
- 피해 장병의 건강권과 명예권, 유가족의 알 권리, 신원권 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

○ 군인권 관련 법령 모니터링 및 법원 의견제출

- 군인권 관련 법령 모니터링 및 개선안 마련
- 군인권관련 주요 재판에 대해 의견 제출

2. 방문조사 활성화·내실화를 통한 인권침해 사전예방 [군인권보호총괄과]

○ 군부대 방문조사

- 군부대 방문조사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고, 권고이행 실태 점검과 연계하여 육군, 해군, 공군, 해병대 부대 중 주요 부대를 중심으로 부대 선정 후 방문조사 실시

○ 군 구급시설 방문조사

- 군 구급시설 운영 실태, 구급시설 내 시설·환경, 수용자 처우 등에 대한 인권 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책 마련

3. 군 사망사건 신속대응 체계 구축 및 군인권 현안 적극 점검·대응

[군인권보호총괄과, 군인권조사과]

○ 군 사망사건 조기 개입 등 신속대응 체계 구축

- 사망사건 등 주요 군 현안 발생시 발생현장에 신속 출동 및 현장 대응
- 피해자/유가족 면담, 피해자 보호조치 및 유가족 요구사항 확인 등 지원체계 강화

○ 군인권 현안 점검·대응

- 위원회 기사스크랩, 온·오프라인 언론 보도 모니터링 강화
- 군인권 관련 단체와의 일상적 소통 강화, 이를 통한 통한 현안 과제 적극 발굴
- 군인권 관련 시민단체, 군인권 관련종사자, 현역·전역 군인 및 가족 간담회 개최

○ 군인권 기획조사 강화

- 군 인권 침해사건의 중대성과 상당성 고려 직권조사 발굴 및 개별 진정사건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 등 확대 조사

4. 군 성차별·성폭력 등 사건조사 및 권고 이행 모니터링 [군인권협력지원과]

○ 군 성차별·성폭력 등 사건조사 매뉴얼 작성 및 조사 전문성 확보

- 군 성차별·성폭력 등 사건 처리와 관련한 자료 정리 및 분석
- 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 내부 교육

○ 권고 이행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

- 군 성폭력 관련 권고 이행 지속 모니터링
- 군 성폭력 관련 제도개선 검토

5. 군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군 인권교육 및 홍보 강화 [군인권협력지원과]

○ 군인권교육 기반 강화

- 군인권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하고,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군인권교육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군 내 인권침해 사전예방 도모
- 군인권교관 심화과정, 영관급 인권감수성 향상과정, 위촉강사 군분야 역량 강화과정 운영 등

○ 군 인권교육 운영(제도) 현황 실태조사

- 군 인권교육 법령·제도·정책·관행 현황 조사, 부대 운영 주기에 따른 인권교육 개선 방안 연구, 각 군 특성을 고려한 실효적 교육체계 구축 방안 연구
- 국방부 및 각 군 차원의 제도적 개선사항 도출

○ 군 인권교육(콘텐츠) 실태조사

- 육군, 해군, 공군, 해병대 각 교육기관 인권교재 파악
- 육군, 해군, 공군, 해병대 야전부대 인권교육 교재 및 참고자료 전수조사
- 과거에 출간된 각 군 인권교육 교재 수집 및 분석
- 계급별 인권교육 교재 비교 연구
- 활용도 높은 군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방향 및 시안

○ 군 인권 기획 홍보

- 군 인권 존중 문화 확산,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절차 인지도 제고
- 군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
- 군 장병의 인권보호에 유익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

6. 군 인권 국내의 협력 활성화 [군인권협력지원과]

○ 군 인권 시민사회 협력 활성화

- 군인권포럼 개최 정례화 및 분과별 모임 운영 안정화
- 군 인권 관련 시민사회 및 유족 등과의 간담회 수시 개최

○ 군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교류 협력 활성화

- 군옴부즈기구 국제컨퍼런스 참석
- 해외 군옴부즈기구의 군인권증진 우수사례 정리

7. 효과적인 군인권업무 지원체계 구축 [군인권보호총괄과]

○ 군인권전문위원회 내실화

- 군인권전문위원회의 정례화와 적극적 안건 발굴을 통해 내실 있는 전문위원회 운영

○ 군인권보호국 직원 역량 강화

- 군인권 특성에 맞는 조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 기법 등 군인권보호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실시

○ 직원심리 프로그램 강화

- 군 사망사건 입회 직원 심리상담
- 정서조절 능력 및 자기회복 능력 강화 회복프로그램 실시

○ 군인권통계시스템 내실화

- 군인권 관련 통계 정비를 통해 군진정 사건에 대한 흐름과 변화 분석 및 정책 개선과제 도출

참고 **관리과제 추진 실적**

- (2021) 군대 내 장병 의료 및 건강권 보장 강화
- (2021)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군인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
- (2021) 군인권보호관 도입 지원 및 협력기반 마련
- (2021) 방문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예방
 - 군 구급시설(육군3, 해군1, 공군1, 해병대1) 방문 조사 실시
- (2022) 군인권보호관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
 - 군인권보호위원회 개최, 군인권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
- (2022)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개선 및 모니터링
 -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긴급구제
- (2022) 각 군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
 -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정책권고안 작성
- (2022) 방문조사 및 제도개선을 통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사전 예방
 - 신병 훈련소(육군, 해병대) 방문조사 실시

참고 **후속과제**

- (2024) 실효적인 군 인권 침해 구제방안 마련
- (2024) 군 내 차별 해소 방안 마련

⑥ 체계적 인권진단과 평가제도 마련

1.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발간 [인권정책과]

○ 인권상황보고서 발간

- 대한민국의 인권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, 주요 인권주제 선정, 주요 영역별 국내 인권상황 내용 집필 및 인권상황보고서 초안 검토·편집
- 인권의 개선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종합적 인권상황 보고서 발간

2. 국가인권통계 시스템 구축 및 관리 [인권정책과]

○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

- 행정자료 등 추가 자료원을 활용한 신규통계 발굴 등
- 인권의식실태조사 실시, 인권취약계층 실태조사 협의체 운영, 토론회 개최 등

3. 권고·의견표명 이행실태 확인·점검 [정책부서, 조사부서]

○ 권고·의견표명 이행실태 확인·점검

-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의해 2022년 하반기부터 권고·의견표명 이행실태 확인·점검 권한 발생에 따라 권고·의견표명에 대한 이행 현황부터 검토하여 실제 권고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 수립 검토
- 권고·의견표명 대상 기관에 대한 이행 점검 자료 요청
- 전문가 자문 등 의견 수렴 등

참고 **관리과제 추진 실적**

- (2021) 국가인권통계시스템 구축 및 관리
 - 국가인권실태조사 실시 및 3개년도(2019~2021) 국가인권통계 구축

- (2021)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(NAP) 권고
 - 제4차 인권NAP 추진기획단의 실무초안 마련 및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
 - ※ 제4차 인권NAP 권고는 2022년에 이루어짐
- (2021) 기본권 보장 강화 제도화 추진
- (2022) 국가인권보고서 발간
 - 2021 인권상황보고서 발간
- (2022) 정책 및 제도에 있어서 인권적 평가기준 마련
- (2022) 국가인권통계시스템 구축 및 관리
 - 인권의식실태조사(명칭 변경) 실시 및 4개년도(2019~2022) 국가인권통계 구축

참고 **후속과제**

- (2024) 분야별 인권적 평가기준 마련

⑦ 위원회 전문성 제고와 독립성 강화

1. 위원회 업무 기획 및 총괄 [기획재정담당관]

○ 업무계획 수립 및 관리

- 인권증진행동전략, 부서 의견 등을 고려한 업무계획 수립 방안 마련
- 업무계획 수립 지침 보완
- 활발한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한 업무계획 수립

○ 인권증진행동전략 관리

- 주요한 인권환경 및 위원회 여건 변화 발생시 인권증진행동전략 수정·보완
-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한 인권증진행동전략 수정·보완

○ 연간보고서 발간

-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9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(연간보고서)
- 국제인권기구 등에 배포를 위해 영문판 연간보고서 발간

○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발간

- 위원회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통계를 작성하여 위원회 활동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위원회 업무 방향 정립에 활용

○ 제안제도 운영

- 업무 개선을 위해 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집하고 활용
-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제안 채택 및 이행 점검

2. 위원회 성과 관리 [기획재정담당관]

○ 위원회 업무평가

- 업무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다각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더 효과적인 업무 추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위원회 성과 제고에 기여

○ 분기별 업무점검

- 주기적 위원회 업무점검, 부서별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위원회 업무의 효과성 제고

○ 만족도 조사

- 상담·민원, 진정, 인권교육 등 위원회 주요 대민 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
- 관계 부서 사전 설명회 및 조사 결과의 업무 반영을 위한 최종보고회 개최

3. 능동적 조직체계 구축 [기획재정담당관]

○ 능동적 조직체계 구축

-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
- 조직체계 변화 및 개선을 위한 심층적 조직진단 추진
- 2024년 정기직제 및 수시직제 협의 등을 통한 조직 확충, 총액인건비제·재 배치정원제·팀제 등 운영으로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등

4. 전략적 자원배분과 효율적 예산 관리 [기획재정담당관]

○ 전략적 자원배분과 효율적 예산 관리

- 전략적 자원 배분과 예산 편성
- 분기별 예산집행점검,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을 통한 효과적 예산집행 관리

- 재정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내실화를 통한 체계적 예산 성과관리

5. 대국회 업무 및 인권현안 활동 지원 [기획재정담당관]

○ 대국회 업무 및 인권현안 활동 지원

-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국회 업무 수행
- 국회 상시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해 평등법 입법,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등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대국회 지원

6. 안정적인 법무서비스 제공 [행정법무담당관]

○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등의 안정적 수행

- 행정심판위원회 정례 개최, 행정심판 재결례 공유를 통한 진정사건 조사의 적정성 제고
- 진술기회(구술심리) 부여, 행심 재결례의 정례 분석, 조사부서 공람 등 절차 명확화를 위한 행정심판 매뉴얼 정비
- 진정사건 결정 등 위원회 대상 소송 수행
-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
- 소송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공유

○ 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개정

- 위원회 독립성 강화(조직, 예산, 인사 독립성 등)를 위한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 등 입법 추진
- 독립성 강화 관련 의원발의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개정안에 대한 검토·지원

○ 위원회 법령의 시의적절한 정비

- 의원발의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개정안 검토 및 의견제출

- 국회 계류 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출
- 소관 행정규칙 제·개정안에 대하여 상세하고 체계적인 심사 수행

○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·자문 등의 적시 지원

- 각 부서의 법령 해석 질의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회신
-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통하여 심층적 검토 실시

○ 업무협약 및 비영리법인의 체계적 관리

- 위원회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정밀한 심사 및 추진현황의 점검 및 보고
-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건의 면밀한 검토 및 위원회 상정, 사무점검 등 기 설립된 비영리법인 관리·감독

○ 발간사업

- 위원회 결정레집, 법규집, 공보 등 발간

7. 체계적 감사를 통한 투명성 제고, 공직기강 확립 [행정법무담당관]

○ 체계적 감사를 통한 투명성 제고, 공직기강 확립

- 2022년 감사지적사항 이행사항 점검 및 자체감사 실시
- 징계위원회 운영 및 사무관리, 수사기관 수사결과 통보·제보 등에 대한 특별 감사 및 조사, 직원 관련 민원 처리, 일상감사
- 반부패·청렴교육, 외부강의신고, 공직자 병역·재산신고 지원 및 관련기관 업무 협조,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규정정비 등

8. 기록물 평가기준 정비 및 정보공개 의 적정성 제고 [행정법무담당관]

○ 기록물관리 지도·감독과 정보공개 통계관리

- 처리과에서 생산·접수되는 기록물의 등록, 분류, 편철 관리를 통해 책임 있는

행정구현과 기록물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 도모

- 정보공개통계자료를 작성해 법정기한 준수율을 높이는 등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

○ 정보공개의 적정성 제고

- 진정사건기록 및 일반정보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등
- 정보공개심의회 운영
- 유관기관 수사 및 자료협조와 문서송부촉탁 의뢰 처리 등

9.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[정보화관리팀]

○ 인권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

- 업무 연속성을 위한 지속적인 인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
- 보안장비, 기반시설 등 정보인프라의 운영관리
- 소위원회 화상회의시스템의 화상 송·수신 기능 점검 관리

○ e-진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

- e-진정시스템, 인권정책시스템, 통계시스템의 유지보수 운영관리
- e-진정시스템 및 통계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

10.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[정보화관리팀]

○ 행정정보시스템 구축

-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취약점이 노출된 인트라넷 재구축
- 행정정보시스템 이용자 기능 요구사항 반영

11. e-진정시스템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[정보화관리팀]

○ e-진정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

- e-진정시스템 정보화 전략계획(ISP) 수립 및 업무재설계 수행
- 국민과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e-진정 정보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는 단계별 실행계획 마련

12. 노후 H/W, S/W 교체 및 정보보호 강화 [정보화관리팀]

○ 노후 H/W, S/W 교체

- 노후화된 행정정보 기기(PC, 모니터 등) 교체
- 한글, MS오피스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지속적 사용

○ 정보보호 강화

- 유해사이트 차단 장비 도입
- 백신 및 바이러스 관리 솔루션 도입
- 정보보호 교육 실시

13. 인권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 [운영지원과, 인권교육운영과]

○ 인권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

- 인권 감수성 및 인권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 대상별 실무 중심 참여형의 교육, 교육 대상별 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운영 및 법정 의무 교육 실적관리 강화
- 사회와 소통하는 인권옹호자 육성과 위원회 비전 구현을 위한 직무 수행 역량 및 태도 함양을 목적으로 인권조사관 학교, 인권정책학교, 인권교육학교 등 인권전문학교 운영

14. 조직 역량강화 및 성과제고를 위한 인사관리 [운영지원과]

○ 조직 역량강화 및 성과제고를 위한 인사관리

- 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발굴 및 보직 관리
- 복무와 업무의 조화를 위한 근무여건 확립
- 공정한 평가제도 정착 및 개선
- 인권위원 임기 만료 시 임명의 적시성 확보
- 대한민국 인권상 수여를 통한 위원회 위상 강화 및 인권존중문화 확산

15. 활력있는 직장문화 조성 및 복지 향상 [운영지원과]

○ 활력있는 직장문화 조성 및 복지 향상

- 내실있는 직원 참여·소통 프로그램 운영
- 직원 복리 후생 향상과 직원 고충 예방 대응을 통한 업무능률 제고
- 공무원·공무직 노조와의 상호존중의 노사문화 정립

16. 위원회 의사업무의 안정적 운영 [운영지원과]

○ 위원회 의사업무의 안정적 운영

- 전원위, 상임위 의사의 안정적 운영과 인권위원의 업무 적응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 지원

17. 청사 및 보안업무의 체계적·효율적 관리 [운영지원과]

○ 청사 및 보안업무의 체계적·효율적 관리

- 직원과 민원인의 편의성을 고려한 청사 시설 및 환경 개선
- 정기 보안점검을 통한 화재예방 및 문서보안 관심 제고
- 을지연습, 화재, 지진 등 대피훈련 등 훈련 실시
-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적정한 당직업무 수행 지도

18. 세입·세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[운영지원과]

○ 세입·세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

- 예산 집행 전문성·일관성 제고
- 회계업무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
- 결산 심사 등에 효과적 대응
- 예산운용 및 공제 사무의 체계적 관리
- 연말정산 및 성과상여금 적정 지급

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

- (2021) 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 사업
 - 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(11. 25.) 실시(대통령 등 주요 인사 참석)
- (2021) 국가인권위원회 20년사 편찬
- (2021) 안정적인 법무서비스 제공
 -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(군인권보호관 규정)
- (2021) 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강
 - 인권 의사지원 시스템 구축, e-진정시계열통계 시스템 구축
- (2022) 위원회 업무 기획 및 총괄
 -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10대 인권과제 제시(3. 29.)
- (2022) 능동적 조직체계 구축
 - 군인권보호국(군인권보호총괄과, 군인권협력지원과) 신설

참고 후속과제

- (2024)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
- (2024) 노후 정보 인프라 개선